

“다문화 가족 이혼율 줄여야”

두세훈 의원, 도내 다문화 가족 이혼건수 전국 4번째로 높아... 특단의 대책 수립 촉구

전북도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도내 일반가족의 이혼율에 비해 7배 가량 높아,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부위원장, 원주2)은 도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도내 다문화 이혼건수/도내 다문화가구수)이 3.7%(404/1만 930)이고, 일반가구의 이혼율(도내 일반 이혼건수/도내 일반가구수)은 0.5%(3,564/74만3,341)로 도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도내 일반가구의 이혼율보다 무려 7배 가량 높다고 밝혔다.

이들러 두세훈 의원은 전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별 전체 이혼건수 대비 지역별 다문화 가족 이혼

건수 비중에서도 제주도, 서울,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북도가 도내 다문화 가족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15년)에 의하면 도내 다문화가족의 주요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32%), 학대와 폭력(18.2), 경제적 무능력(16.7), 음주 및 도박(9.6%), 외도(6.8%)순으로 나타났다.

두세훈 의원은 도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첫째로 다문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아 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에 협력하여 다문화 부부 인권 및 대화 교실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고, 둘째로 이주민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취업교육 및 알선 등 취업패키지를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다.

다행히 전북도는 도내 다문화가족 이혼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한부모 다문화가정에겐 한부모가정자조모임 실시, 한부모 가정 프로그램 및 캠프와 아동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생활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세훈 의원은 외국인 아내가 남편과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대안으로 전라북도가 외국인 아내가 남편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 국적취득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내 14개 시·군과 협력하여 한글교육과 함께 국적취득 시험반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농산업경제위원회,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제368회 정례회 주요일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일 시작으로 1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에는 농축수산물식품국, 전라북도 생활물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의원별 주요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도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증적 기반 마련 위해 조례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조항 미 준수 등에 대한 면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철수 부위원장(정읍1)은 축산 식품관련 화과 예비 졸업생, 취업준비생 등을 보조요원으로 채용하여 청년일자리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중인 축산식품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보면 사업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업무수행 지적,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전문적인 지식 확보 기회 마련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최근 3년간 중앙부처에 건의 내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나서서 국가 재정이 요구되거나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국가 정책화할 사항 등에 대한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도의회에서 정부에 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함께 고민하여 도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3)은 도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 건물만 지어 놓고 활용이 안되는 획일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요청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면담

송성환 의장이 14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한 디나라 케멜로바(Dinara Kemelova)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만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송 의장은 “디나라 케멜로바 대사의 전라북도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키르기스스탄이 농도인 전북의 선진농업을 배우고 관련 기술과 산업 등도 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성환 의장은 “농업 관련 국가기관들이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데다 농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스마트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며 “축적된 농업 기술을 이들 농업기관과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등을 통해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디나라 케멜로바 대사는 “키르기스스탄은 문화 관광 자원이



매우 풍부함에 반해 농업과 농기계 산업은 다소 뒤쳐져 있다”며 “전북의 선진농업을 도입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해 우호 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제언했다.

/김진성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 추가 檢개혁안 검토... “검찰개혁, 지체없이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방안 등 추가적인 개혁안을 검토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며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한국당 정권의 검찰개혁 깽뎛기 시도는 상습적이다. 스폰서 검사, 우병우 등 검찰개혁 요구가 분명한 때마다 길로리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는 유보하고 무력화하기 일췌였다”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찰·사법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요즘들어 검찰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같

다”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개혁권고안을 내놨지만 법무부의 이행과 진척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검찰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까지 제시된 검찰개혁안에 대한 규정이나 훈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 상명하복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배당 기준을 검찰정보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며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발맞춰 정보수집도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강화 역시 검찰 내부의 수평문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특위 공동위원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종목은 검찰의 직접 수사 내용”이라며 “제도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광범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오늘 당정에서는 그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면 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공판부로 돌려 형사부·공판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등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밖에도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는 방안,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찬욱 도의원, 레지오넬라균 검사 예방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제10선거구, 환경복지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복지국, 장애인복지관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 예방대책 촉구

라균 예방과 장애인일자리 마련, 어린이친의체함과 안전인력 확보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내 목욕업소 레지오넬라균 검사 관련 강화되는 행정조치와 감사대상 확대에 따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일자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

이 주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친의체험관의 광대한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우리도 어린이친의체험관과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의 경우 시설관리직만 10여명 정도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